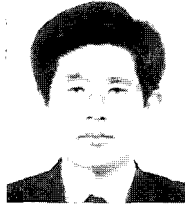


# 재난관리의 과학화를 위한 사회심리학적 접근



박 광 길 소방방재청 기획관리관실 혁신인사담당관

## 1. 재난관리의 학문적 접근과 재난심리

### 1) 사회현상 총합으로서의 재난관리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재난을 경험하게 된다. 자연의 현상으로 인한 홍수, 태풍, 지진과 해일, 집중호우와 폭설, 극심한 가뭄 등과 더불어 나아가 오늘날에 있어서 기상의 이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재앙이라고 불러야 할 자연 재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편리를 도모하는 문명의 혜택에 비례하여 가스폭발, 다리와 건물의 붕괴, 지하철을 비롯한 지하시설물의 사고, 화학물질과 원자력의 유출 등 그 이기에 기인한 사건이나 사고로 불리는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경험하면서 시민들은 재난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피해로 받아들이는 운명론적인 태도에서 서서히 다른 시각으로 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재난을 당하면 그 책임을 나랏님 즉 국가에 돌리거나 돌리고자 그 이유를 찾게 되었던 생각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발전해 나갈수록 국가가 산업과 부를 축적해 감에 따라 점차 국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방관적 개념에서, 국민 자

신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현상이다.

이에 국가는 먼저 기술적·구조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기 시작한다. 재난의 사후 대응과 복구에 관심을 갖게 되고 건축, 토목, 치수의 기술부문으로 그 피해를 줄이거나 대비하고자 한다. 그러나 재난대상의 그 자체에 기술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비구조적인 접근을 하게 된다. 이제는 선진재난관리가 예방과 경감으로 무게 중심을 두면서 사회적·복지적인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현실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재난 관리에 대한 하나의 이론적인 분야가 형성되기보다는 여러 분야의 사회적 총합으로서의 재난관리가 되었고, 재난관리라는 또는 위기관리라는 한 분야로서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되었다.

### 2) 체계적 재난관리이론의 요구

재난관리 또는 광의의 위기관리가 하나의 학문으로서 또는 이론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이론의 정립이 요구된다. 재난관리가 단순히 위기관리의 한 부분으로서 이해하고 사회학의 한 분

야로서만 이해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학의 한 파트로서도 부족하다. 그렇다고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경영학적 측면의 위기 관리가 국가경영에서 적용되는 것도 무리이다.

재난이라는 사회현상이 제대로 관리되기 위하여는 여타 부문과 같이 이론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그 적용에서도 과학적인 체제가 잡혀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재난이라는 개념부터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일상적인 사건이나 사고와는 구분되는 재난(disaster)<sup>1)</sup>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부터가 필요한 것 같다. 미국에서는 재난(disaster)을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 및 국가의 보호해야 될 대상이 손상을 입어 일상적인 관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어 신속하고 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일련의 사태’ (FEMA, 2001)로 정의하고 있다

UN에서는 ‘일정 지역사회에서 평소의 조직과 기능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로써 생명과 재산, 사회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하는 일련의 사태’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우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국민의 생명·재산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고로 인한 피해,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확실한 재난의 개념하에서, 그것을 관리하고자 하는 특화되고 구분된 조직이론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며, 그 조직내의 인적·물적자원의 배분에 관한 이론이 정립되어 내외부간의 작용관계를 통하여 투입과 산출의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인문 및 이공계통의 학문이 응용되어 들어오고, 여기에 사람의 행동표출이나 학습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내적인 심리현상을 파악하는 등 심리학이 응용될 때 과학으로서 자리매김 될 것이다.

### 3) 재난심리학의 비중 증대

심리학은 인간생활의 거의 모든 부문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범죄심리와 그 치료,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심리적 치료, 금연을 위한 프로그램의 심리적 역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자칫 심리학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마치 점장이의 역할을 상상하기도 하는 오류가 있긴 하다. 재난에 관하여도 심리학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하니 마치 재난을 일으키는 사람의 심적인 상태를 미리 예측하고 알아내어 막는다는 독심술로 오해하기도 한다. 또한 재난심리학의 일부가 되는 사후 심리치료만을 연상하는 편견도 있고,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보상절차 과정 중 재난책임기관에서 적절히 회유하는 기법이나 그들이 정부의 시책에 순응할 수 있는 편법을 강구하는 기술로 치부해 버리는 잘못된 인식을 가질 염려도 있다.

재난은 사회심리학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좋은 재료가 되는 것이다. 사회심리학의 접근은 재난의 연구에 기존의 어느 심리학적 접근 보다 더 적합하고 이를 사용한 재난의 분석은 궁극적으로는 재난의 과학화를 꾀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과학은 실용적 관심사의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지식은 각종 재난의 중요성이나 특이성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또 다른 한편 군사전략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sup>2)</sup> 실상 재난에 관한 심리학의 응용이라던

1) 혹자는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들어 “재해”라고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규정의 “재해”는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나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상해를 당하는 것과 교통사고 등까지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국가나 사회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재난”과는 구별됨이 좋을 것 같다. 또한 일각에서는 재난의 결과로 피해를 입은 상태를 “재해”로 보는 관점도 있는 것 같다.

2) 차재호, “재난의 심리학” 심리과학 Vol, No, 1985, p17)

사회복지적인 또는 재난관리적인 면이라기보다는 의학적 면에서 재난을 당한 후의 정신적인 후유증을 치유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적인 면에서의 교육심리, 공학을 재난관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연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현장에서의 대피 및 피해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 등 폭 넓게 심리학이 응용되어야 한다. 재난에서의 개개인의 의사결정과 행동, 이를 위한 학습, 재난관리 정책담당기관의 의사결정과 재난현장에서의 구조구급 및 대응 등 그 수비 범위에 몰입되어야 한다.

일용 관점에 따라서는 억지 논리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재난심리학의 패러다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불변성과 이론의 틀을 꾸준히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난심리는 '재난관리의 모든 단계에 있어 인간행동에 관한 연구로서 합목적성을 이끌어 내고, 재난으로 인한 충격을 이해하여 사전에 예방·경감·완화하고, 사후에 치유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이론'으로 우선 그 개념을 잡아보고자 한다.

## 2. 재난심리학의 현 위치

### 1) 재난심리학의 태동

심리학이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출발한 것은 W.Wundt가 1879년 독일 Leipzig대학에서 처음 심리학 실험을 한때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전까지는 정신세계와 물질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여긴 것 같다. 정신세계는 인간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에 반기를 든 학자가 바로 생리학자이며 철학자인 Wundt였다. 이후 심리학자들은 실험실과 사례를 통하여 연구가 계속되었다.

재난심리학도 결국 이러한 테두리를 원용하면서 출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실험을 통하여 현상의 결론을 도출하고, 타인의 사례 및 공상적 사고를 대상으로 재난심리학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 후 대체로 재난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다룬 가장 체계적인 연구로는 Fritz, C.E.의 1960년대의 연구를 꼽고 있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과 구난자, 그리고 재난관리자들 간의 심리적 결과로서 역할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재난이 지역사회 내에서의 단결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를 발표한 것이다.

### 2) 국외 연구 현황

#### (1) 미국에서의 재난심리학

미국에서는 Fritz 이전에는 구호(relief)라는 측면의 정책과학으로 발전시켜나가면서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가난이나 범죄와 같은 사회병리의 현상으로 다루어 나갔다. 국가차원에서 재난을 연구하게 된 것은 1950년대 중반에 세계질서가 핵으로 위협을 받게 된 때부터이다. 이 당시에는 간헐적으로나마 재난을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으로 연구하던 것을 더욱 사회학적인 방향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Fritz 이후로는 거의 심리적인 연구가 없었다. 그러다가 70년대 무렵 심리학 안에 환경심리학이 대두되면서 재난의 연구는 그 테두리 안으로 수용되게 되었다. 현재 환경심리학 안에서 일하는 사회심리학자들의 활동을 환경사회심리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데, 환경사회심리학은 에너지 보존문제, 건축체험의 미학, 환경지도화(매핑), 재난, 그리고 스트레스가 인간작업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다 (Dareley & Gilbert, 1985). 이렇게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재난의 연구는 심리학, 특히 사회심리학이나 환경심리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sup>3)</sup> 이들만으로는 부

3) 현실적으로 재난은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환경문제와 함께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직이론적 측면에서도 필자는 환경부와 현 우리의 소방방재청이 통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족하다. 환경심리학이 재난의 연구를 그 범위 안에 수용하기는 했으나 대개의 경우 재난의 문제를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Dareley & Gilbert, 1985 참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난에 대해서 역점을 둔 환경심리학적 저서도 있다(예: Craik, 1970; Ittelson et al., 1974). 환경심리학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도 가장 연구가 활발했던 부분이 재난분야라는 것이 분명해졌는데(Dareley & Gilbert, 1985), 그것은 재난이 환경 심리학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연구된 역사가 오랜 문제분야이기 때문이다.<sup>4)</sup>

이러한 연구가 재난관리나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행정에 투영되고 있다는 표면적인 양태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같이 보이기도 한다.<sup>5)</sup>

## (2) 일본의 재난심리학

일본은 1964년 동경올림픽이 개최될 때 경찰내에 경비심리연구회가 만들어져 보다 안전하게 경비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그 해 6월 니이가타에서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자 사후의 심리적 변화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이 활동이 일본의 재해심리학 연구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다.

1995년1월의 효고현 남부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된 것은 일본정부의 구조 지연이었다. 구조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입수되지 못하자 피해자들은 유언비어와 루머에 현혹되어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할지 판단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처럼 재난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동요하며, 정확한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어 제2의 재난을 초래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이 재난심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연유가 된 것 같다.

1980년대 무렵까지 눈에 띄는 연구로서는 ‘빌딩화재에 있어서의 피난행동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실험’, ‘재난시의 루머에 대한 조사연구’, ‘재난 지역의 주민의 공황(panic)발생 예측을 위한 연구’, ‘1980년 남부 이탈리아의 지진에 대한 현지 조사’, ‘1980년 우리나라의 김포공항에서의 화재사고시의 탈출 피난행동에 대한 연구’ 등에 있어서의 행동실험을 실시하였던 것이 재난심리의 단초가 되었다.

그러나 지진을 수시 경험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사후 심리치료에 더 관심을 갖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응용심리학의 한 부분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획책하였으나 현실은 심리치료에 그치고 있었던 것 같다. 이후 대학에서나 대학원에서 이에 대한 비판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모습이 바뀌어 가고 있었다. 미국의 심리학회에서도 아직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을 때에도 일본에서는 그 연구가 가속화되고 있었다. 즉 다음과 같이 재난심리학의 연구범위를 넓혀가고 있었고 그 수단이나 방법도 다양하게 넓히고 있었다.

즉, 연구대상을

- ① 피난행동
- ② 밀집상황에서의 집단사고
- ③ 재난 피해자 및 재난 구조자의 정신건강
- ④ 재난시의 비정상적인 정보에 의한 사회적 혼란 (루머, 잘못된 보도)
- ⑤ 재난시의 원조 행동
- ⑥ 방재의식과 방재행동
- ⑦ 재난에 대한 관념과 재난문화
- ⑧ 위기관리에 있어서의 심리학적 측면
- ⑨ 방재교육으로 잡고 있었다.

4) 차재호, 재난의 심리학, 1995

5) 그러나 필자가 미국 FEMA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을 때(2000. 9-2002. 4) 경험한 바로는 각 부서에 적지 않은 심리학과 출신이 재난관리의 중견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주정부에도 재난이나 위기관리부서에 특히 교육과 홍보부서에 심리학과 출신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위기관리의 중앙교육기관인 격인 연방재난관리청(FEMA) 소속의 EMI의 교과정내에도 관련 교수과목이 있었고 필자도 직접 강의를 받기도 하였다. 학계에서의 연구나 실무 재난관리의 국가기관에서 실용화하고 있는 수준은 미국이 상당히 앞서 가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리고 재난심리학은 실험법이나 조사법, 그리고 면접법 등의 방법을 사용하며, 사회심리학이나 임상심리학 등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응용심리학을 원용하고 있다.

일본에서 재난심리학은 각 연구기관과 대학, 민간의 조사기관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수는 100여명 정도로 보고 있는 수준이다. 대학에서도 정규과정으로 재난심리학을 강의하고 있는 곳을 일본대학 한 곳에 지나지 않으며, 학회는 2003년부터 준비했고, 전국적인 조직은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연구 발표는 일본심리학회, 일본응용심리학회, 일본응용심리학회, 일본사회심리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다수의 학회에서 재난에 관한 심포지엄이 개최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재난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일본의 경우는 지진이나 분화, 해일과 같은 자연재난이 많고, 또한 2차 산업의 발달에 의한 인적재난의 위험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재난심리학에 요구되는 기대는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재난은 잊어버리고 있을 때 찾아온다.”는 말은 일본인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는 격언이다. 특히 지진이나 분화 등의 자연재난은 발생의 예견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설마”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하며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sup>6)</sup>

특이할 점은 후술하는 일반적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심리치료인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와 더불어 소방관 등 재난현장의 구조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심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소위 CIS(Critical Incident Stress)에 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 3) 국내 연구 현황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에 관한 관심은 몇 차례 반복

된 크고 작은 자연재난으로부터 큰 피해를 당하면서 사후 수습과 복구를 위한 기술적인 접근으로 국가의 정책이 수립되어 왔다.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치수를 위해 더 높게 제방을 쌓고, 자연히 생성되어온 하천을 토지이용률 제고라는 측면만을 생각하여 곧게 펴서 관리를 하는 등의 조치와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시혜적인 보상과 지원을 해주는 것이 주된 재난관리정책이었다. 그러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 등 연이은 인적재난으로 인하여 재난관리 조직이나 그 정책을 확대해 오다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축소되었다. 이는 재난관리업무가 주된 업무의 부수적이고 종속된 업무로, 그에 대한 예산은 투자라기보다는 비용의 개념으로 인식하여, 쓰지 않고 적게 쓰면 성공적이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재난관리를 하늘의 운명에 맡기는 것 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미국의 9.11테러가 발생 한 이후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재난관리와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관심과 시스템에 대하여 재고를 하게 된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한번 초유의 가공할 대구지하철 방화사고로 인한 대형 참사가 일어나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 제1의 과제로 국가의 체계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재난관리 전담 기구인 소방방재청이 태어난다. 이를 계기로 재난관리에 대한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 진다. 즉 공간 재난관리의 중점이 재난발생 이후의 관리에 있었던 것이 이제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쪽으로 무게를 이동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재난관리의 사전 홍보 및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재난의 자기책임과 사회의 안전문화 정착의 노력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인간의 행동방식이나 인지, 재난현장에서의 사람의 반응연구, 학습, 사후의 심리적지지 및 치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자연스럽게 재난심리에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심리학회나 연구회에서 역동적으로 연구했다기 보다는 소방방재청이 출범하면서 정부가 먼

6) 김재휘, '일본의 재해심리학 및 재해 구조자의 CIS, 방재연구 제5권 제2호, 2003.6)

저 학교나 학회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소망과 간접적인 독려가 있었다.

우선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차재호 교수의 관심이다. 서울대학교 사회심리학 차재호교수는 1991년 그의 논문「피노라마적 사회심리학의 전개」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회사건을 거시적인 시각에서 사회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노라마적 사회심리학(Towards a panoramic social psychology)을 주창하면서 재난과 심리학과의 연결을 시도하게 된다. 여기서 차교수는 파노라마라는 의미는 정통사회심리학이 보여 온 좁은 시각과는 달리 거시적 시각을 유지한다는 뜻을 담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자연적재난이나 인적재난처럼 소위 희소사건(재난 개념의 각도에서 보면 희소라는 단어가 유의미)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다 넓힌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사회심리학에서는 재난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본다면 파노라마적인 관점에서는 재난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집단의 역할이나 상호작용을 보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홍수가 발생하면 피해자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등장하는 인물들 - 주 구조자, 언론관계자, 구경꾼, 심지어는 도둑까지도 관찰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의 의의중 하나는 각종 재난에 대해 심리학적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1995년의 논문에서는 안전문화정착을 사회심리학적 접근으로 시도한다. 이것은 재난심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당히 발전적인 시도로 보고 싶다. 안전에 관한 행동방식이나 관행을 의미하는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또한 안전불감증이라는 심리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통제할 힘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는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통제현상(illusion of control)'을 원용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 것이다.

이어 차교수는 1998년에 더 발전된 이론을 제시하게 된다. 홍수, 백화점의 붐비, 비행기의 추락, 더 나아가 경제위기까지의 상황을 들어가면서 반복성과 규칙성의 이론을 들어 형태분석(configuration analysis)을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정통적 사회심리학적 접근과 파노라마적 사회심리학을 접근시켜 나가면서 운명통제(fate control)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되는 Gibson의 소위 생태론적 지각이론에 의해 널리 알려진 '제공기회'의 개념 - "사과는 나를 먹어라 하고 물은 나를 마셔라한다"라는 제공기회의 뜻을 소개하고 있다. 재난상황이 이렇듯이 무엇을 구하고 원하고 있는지를 지각적으로 알아야 진정한 재난관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차교수 이외는 재난심리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렇다 할만한 성과의 연구가 없었다. 그러다가 중앙대학교의 김재휘 교수가 일본의 일본대 심리학자인 村?健祐교수의 CIS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재난심리학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의 연구가 우리의 재난심리학에 자극을 주어 발전되었으면 하는 계기가 그 교수가 폐암으로 사망함으로써 열기가 식게 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이후 최근에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관리의 측면에서 연구가 되었다. 그러다가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에서 재난 뿐 아니라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등의 원인에 대한 심리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여 사고에 대한 8편의 논문이 한국심리학회지(2003.vol.9, 특집호)에 실린다. 여기에서 대구대학교의 이종한 교수가 '사고공학화에 대한 심리학적 제의: 안전사고의 심리적 기제와 대안 모색에 관한 여덟 편의 논문을 안내하면서'라는 모두의 글에서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토록 심리학자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sup>7)</sup>.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 논문이 심리학자들의 재난에 대한 특히 예방에 관하여 관

7) 여기에서 눈여겨 볼 것은 지금까지 재난상황에서의 심리적 연구나 사후 심리지료의 관심에서 심리학을 예방으로 끌어 들인다는 점이다.

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재난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이 약간은 혼동되고 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즉 일반적인 안전사고와 전술한 바와 같은 재난의 정의 개념을 구분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재난이라는 틀 속에서 심리학적 응용을 하였다기보다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재난을 바라보고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다수의 아쉬움을 남긴다.

한덕웅의 '한국에서의 안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과제'에서 한국사회의 안전체계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심리와 행동 특성을 분석하고, 이어서 안전 분야에서 심리학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과 연구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즉 안전관리의 책임을 맡은 정부, 안전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 소비하면서 한편으로 공동체의 안전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들, 그리고 안전을 위한 시민운동 단체를 구별하고 이 네 주체들이 각각 어떤 특징들을 보이는지를 논하고 있다. 즉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안전기준을 충족시키면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과 적은 경비를 투자하여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하고자하는 안전의 소비자, 서로 상반되는 입장에 있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선에서 절충하도록 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정부로 보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이들의 안전심리와 행동을 연구하여 응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안전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영역들로는 인지심리가 토대가 되어서 인간-기계체계를 다루는 인간공학 연구와 아울러 안전심리와 행동에 관한 사회행동 연구가 기초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 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여러 전공의 심리학자들이 협력하여 안전체계를 구성하는 정부, 기업, 시민, 시민단체 및 언론에 전문지식과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하여야 하고, 각 기관에서 대중의 태도변화에 활용할 수 있는 홍보계획과 아울러 각 주체들의 행동 변화 계획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지적하고 있다.

이 논문은 재난관리에 있어서의 주체별 행동과 인지심리를 응용하는 하는 것과 재난홍보의 접근 등은

재난심리의 연구분야를 설정하는 큰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본다.

예방의학을 전공한 송동빈은 사람들의 개념적 특성을 재난심리학에 적용하고 있다. 서구와 일본의 사람들은 사고가 일어나거나 본인이 사고를 당할 가능성을 확률론(probability)으로 보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사고의 가능성을 운명론(all or nothing)으로 본다고 가정하였다. 다시 말하여, 확률론으로 안전사고를 개념화한 사람들은 매우 낮은 가능성(확률)이지만 사고가 날 수 있고 그 사고가 본인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사고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가?', '사고가 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생각한다. 그러나 운명적으로 안전사고를 개념화하면 안전사고라는 것은 운이 없어서 난 것이고, 사고가 안 나면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안전사고의 원인을 한국문화의 특성이라는 틀로 이해하고 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후술하는 재난에 대한 '예외의식'과도 일맥상통하며, 국가의 재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고, 재난훈련과 교육 및 학습에 적용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사고 후의 책임의식을 연구하는데도 유용하리라 본다.

산업공학을 전공한 박동현과 배성규의 직업성 요통의 원인에 대한 심리적 요인에 관한 논문에서는 재난의 요인과 징후들을 한국사람들이 생활화해버리는 속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보인다. 즉 작업성 요통의 발생이 작업의 강도보다는 인구학적인 요인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문화심리학적 면에서의 연구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일이 과중한 부서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덜 과중한 부서의 사람들에게 넘기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권한을 양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대로 견딘다는 것이다.

토착심리학(indigenous psychology)이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김의철은 사고에 대한 확률론과 결정론적 관점에 대한 문화적

분석에 관하여 문화를 비교할 때 흔히 이용되는 집합적-개인주의(collective-individualism)의 개념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심리적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 개인주의 문화의 대표적 국가로 분류되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사람들은 사고를 송동빈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확률론으로 인식하고, 어떤 일의 결과보다 일이 진행되는 과정과 안전 그리고 유지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과정 중심적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집합주의 문화의 대표적 문화로 지칭되고 있으며 일의 진행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두 문화의 차이는 집합주의에서는 자기변화와 자기조절로 사고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개인주의에서는 개인보다는 환경을 통제하고 조절함으로써 사고예방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오세진, 최상진, 김형수 그리고 홍선희의 '안전관리를 위한 행동적 연구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제언'에서는 안전사고 관리에 대하여 행동주의적 접근을 하는 연구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제언을 시도하였다. 안전사고의 관리에 대한 기존의 연구방법으로는 공학적 접근, 상관연구 접근 그리고 행동주의의 접근법이 있음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행동주의 심리학의 이론적 틀을 중심으로 한 연구방법이 가지는 장점과 제한점을 소개하고 있다.

이어 최상진과 박정열의 한국의 교통문화에 관하여 교통법규위반의 이유를 들어 법에 대한 인식적인 측면을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고 있고, 이순철의 과속과 서두름에 관하여, 박영신의 청소년들의 안전효능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에 관하여 각각 논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다각적으로 재난심리학에 접근하고 있어 분명 재난심리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어 바람직한 것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심리학의 이론들을 재난관리에 적용하는 것을 찾기보다는, 재난의 현상이나 재난에 등장하는 대상들을 먼저 내세우고 그것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을 접근시켜 하나의 분류로서 이론을 정립하였으면 하는 점이다.<sup>8)</sup>

#### 4) 사후 심리치료 분야

재난관리의 마무리 단계라 할 수 있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는 재난관리의 분야라기보다는 의료분야의 심리학 응용분야로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연구가 진척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러 분야에서 적용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재난심리의 한 파트로서도 그 중요성이 점점 크게 인식되어 가고 있다. PTSD라는 개념으로서 '전쟁이나 고문, 자연 및 인적 재난, 성폭행, 범죄피해 등 일상적인 생활이 아닌 상황에서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후 재경험, 회피 및 둔마 과각성 등의 증상을 겪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것은 원인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는 타 정신과 질환과는 달리 명백한 외부 사건이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구별되기도 한다. 그 증상은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것도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베트남 전쟁이나 삼풍백화점 사고, 대구 지하철화재 참사뿐이 아닌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재난피해 등으로 인한 PTSD가 많을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정확한 집계는 되지 않고 있다.

미국정신학회가 1980년에 정한 진단 및 통계편람은 PTSD의 조건에는 ① 거의 모든 사람에게 고통의 증상을 일으키는 스트레스 유발요인이 존재할 것 ② 외상경험이 있기 전에는 없던 수면장애, 과장된 놀람 반응, 또는 주의력 손상과 같은 증상을 수반하는 외상경험의 재체험이 있을 것 ③ 심리적 둔화 또는 '정

8) 여기서 미국이나 일본의 재난심리학의 연구실상보다 우리나라의 것을 더 할애하여 본 것은 그만큼 우리의 연구가 아직은 미흡하고 기초단계에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 가능한 많이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앞으로 안전·재난·위기에 관한 심리학 관련 논문을 취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재난심리학의 현주소와 연구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동적 무감각증'이 있을 것 ④ 외상경험과 관련이 있는 상황으로 회피가 있을 것의 4가지가 언급되어 있다고 한다. 대체로 재난에 직접 노출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거의 망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심리치료 분야를 따로 살펴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재난심리라고 할 때 이 분야를 먼저 떠올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재난관리의 한 분야로서 사후 재난심리에 관심을 갖고 대한적십자사에서 각종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며 그들을 위로하고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리적 지지라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교육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전문가적인 차원의 접근은 다소 떨어진 것 같다. 본격적으로 사회의 관심을 극히 일부에서나마 갖게 된 것은 대구 지하철 화재로부터 어쩔수 없이 생명을 건진 사람들에게 접촉을 하고 부터일 것 같다. 서울여자간호대학 최남희 교수는 재난관리 단계의 구조·구급단계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생명을 구조하는 것과 아울러 구조자가 일상생활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PTSD 즉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해 주어야 하며, 그들의 개개인의 심리를 파악하고 여러 가지 치료방법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화 즉 내러티브를 통한 치유는 대구 지하철사고로 사망한 유가족과 생존자를 위하여 실제로 적용되었고 이론이 정립되기 시작함으로써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재난관리의 정책적인 입장에서나 사회적인 예방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대구의 지하철 방화의 주범은 사회학적인 또는 범죄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재난발생심리의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 복지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회의 따뜻한 사랑만 그에 게 있었다면 예비재난의 징후군<sup>9)</sup>에 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큰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당사자 즉 그 유가족이나 생존자들에게 대한 제2의 심리적 지지가 결핍된다면 그들 자신이 극복해 낼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릴 경우 자신들만이 피해당사자가 된 우연적 결과의 초래에 대한 원망이나 책임전가를 하고픈 심리 등이 사회로 돌아갈 때 새로운 재난의 징후군 내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심리치료는 비단 재난관리의 사후 단계가 아닌 예방의 단계에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고, 재난관리 정책적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sup>10)</sup>

최근의 남아시아의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발생 하였을 때도 사후에 PTSD에 관하여 세계적 관심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발생후 10여일이 되기도 전에 CNN의 현장보고에 의하면 배를 타는 것은 물론이고 바다로 나간다는 사실조차 겁이 난다거나 정서적 불안과 실어증까지 생존자의 15-20%가 PTSD로 발전 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를 치료하기에는 수년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을 안고 가야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 3. 재난심리학 발전을 위한 제언

재난의 범주가 폭염·황사·적조 등으로까지 새로운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재난관리에 재난심리분야는 중요성이 커지고

9) 예비재난의 징후군이란 필자가 설정한 개념으로 어떤 재난(자연재난은 물론이고 인적재난도)이던지 그 발생의 징후를 사전에 나타낸다는 것이다. 비록 여기서는 사람이지만 재난의 징후를 소유하고 있다는 개념이다.

10) 실제로 대구 지하철사고로 인한 생존자나 유가족들이 보상지원이나 대책수립과정에서 대구시 측과 이들 간의 많은 갈등이 있었고, 불신도 있었지만 민간구조단체나 심리적지지 또는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네러티브연구소의 관계자들에게는 상당한 우호적인 입장과 신뢰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있다는 것이다.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대학의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학문 그 자체의 연구도 의미가 있겠지만 현실에 바탕을 둔 학문은 실용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해야 하고, 배출된 연구자는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삼위일체가 이뤄질 때만이 발전이 있고 인류에 공헌을 하는 살아있는 학문이 될 것으로 믿는다.

먼저 연구이다. 심리학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학원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다.

다음으로 재난관리 행정에서도 재난심리학의 전공자 활용 및 특채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물론 체계적인 연구 지원도 필요하다.

이 논고는(어디까지나 실무를 담당하면서) 심리학이 개입되어야 할 필요한 분야를 제시하는 것이지 확립된 이론은 미약하다는 것을 밝힌다. 오히려 이러한 제시에 대하여 관련학계에서 앞으로 연구를 촉구하는

것으로 여겨 주었으면 한다.

국가나 기업의 위기(재난)관리에서는 정책과 기획을 위한 제도와 관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심리적 요인을 파악하여 응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연구해 나갈 과제이다.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심리적 연구나 일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도 물론 필요하고, 전통적인 심리학의 영역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재난관리에 기여가 부족한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차재호 교수가 제창한 파노라마 재난심리학과 같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난현장에서의 다각적이고 다양한 면을 심리학적 접근방법으로 연구가 되어야 하겠다. 심리를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는 문화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장소, 인류, 그리고 그곳의 등장인물과 집단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개념의 프레임에서 분석하고 논리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차재호, “재난과 사회심리학의 전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 대회논문초록, 1991
2. 차재호, “안전문화 정착에의 사회심리학적 접근”, 안전보건, '1995.5.
3. 차재호, “재난의 심리학”, 심리과학 제4권 제1호, 1995.
4. 차재호, “재난의 사회심리와 형태 분석”, 1998.
5.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9권 특집호, 한국사회문제 심리학회, 2003.4.
6. 김재휘, “일본의 재해심리학 및 재해구조자의 CIS, 방재연구 제5권 제2호, 2003.6.
7. 박광길, “재난상황과 심리적 지지”, 2004.2.
8. 이장호, 심리학 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 1983.12.
9. 이동훈, 위기관리의 사회학, 집문당, 1999.7.
10. 김경해, Let's PR, 매일경제 신문사, 2003.6.
11. 김경해, 큰 생각, 큰 PR, 커뮤니케이션코리아, 2004.6.
12. 최남희, “외상후 스트레스 완화와 네티티브 이론”, 2003.10.
13. 서울네티티브연구소, “그날의 아픔을 넘어서”, 대구지하철참사 2주기 국제심포지엄, 2005.2.
14. North Carolina Division of Emergency Management, Local Hazard Mitigation Planning Manual, 1998.11.
15. Mahbuba Nasreen, "Disaster Research: Exploring the Sociological Approach to Disaster in Bangladesh", Bangladesh e-journal of Sociology, vol 1, No2, 2004.7.